

8) 대구

대구의 경우 3EA의 미군기지가 있다. 이곳의 특징은 곳곳에 미군기지 안내 표지판이 있으며, 일부 미군의 헬기 부대의 경우도 다른 지역과 같은 모습으로 주거지역과 함께 있다.

올해 4월 3일 미군 헬기조종사의 조종미숙으로 기지 주변 한 가옥이 헬기의 추락으로 지붕이 잘려 나가는 피해가 있었으며, 헬기소음이 등가소음으로 81.8dB를 기록하였고, 최고소음은 96.0db를 기록했다. 이러한 소음은 일상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군들의 조종 미숙으로 인한 위협에 심리적 불안감에 싸여 있다. CAMP WORKER의 하천(미군기지에서부터 직접 나오는 방출수)의 경우 수질조사 중 샘플을 분실하여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타지역에 비하여 심한 악취와 산성도를 보여 주기도 했다. 이 부대는 미군의 정비창과 비행부대가 있는 곳으로 중금속과 항공기에 의한 여러 오염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대구에 있는 K-2라는 비행장의 경우 등가소음 87.8dB, 순간 최고소음이 118.3dB를 기록했다. 이지역의 경우도 소음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나, 어떠한 보상이나 소음 저감방법이 고려 되지 않았다.

또한 이지역도 주거지역과 미군기지와 함께있어 이지역 주민의 말을 빌리자면 비오는 날 이 부대로부터 검은 폐수를 방류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9) 포항

포항의 경우 미군기지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위치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미군들이 사용했던 유류저장고가 8개 이상이 지금도 있었으며, 현재 (주)유공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유류고는 휴전이후 계속해서 매설 또는 증설된 것으로 미군이 일상적으로 20%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시에는 사용량을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송유관은 한국군과 유공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미군이 설치한 이 유류고와 전국으로 450KM 매설된 송유관의 경우 시설의 낙후와 관리의 어려움으로 곳곳에서 기름 유출사고를 일으키고 있는데 한 예로 이 송유관이 터져서 포항지역의 논을 기름으로 오염 시키기도 했다. 또한 유류고의 경우 포항에서 큰 산불이 나서 포항시 시민들을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 넣기도 하였고 이 송유관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으로 매설된 450KM의 송유관의 경우 송유관 매설기술과 관리기술의 여부에 따라 온 국토를 기름으로 오염시킬수 있는 위협성을 가지고 있다. 한 예로 이 송유관의 누수율을 2%로 잡는다고 하고 기름의 양을 최소로 잡아서도 36만 평방미터를 기름으로 오염시킬수 있는 양이다. 미군은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만든 그들의 시설을 분명히 원상복구 해야하는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10) 부산

부산에는 유명한 하야리아라는 부대가 있다. 이 부대는 부산의 8개의 부두중 1개의 부두를 점유 하고 있으며, 항구를 끼고 있음으로 해서 오염원을 바다에 직접 투기할 경우 어떠한 증거도 찾아내기 어려운 조건을 기지고 있다. 특히 미항공모함이나 핵추진 함정(또는 잠수함)이 이곳에 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일본의 오키나와에서도 문제가 되는 핵추진 또는 탑재된 미항공모함 또는 함정이 이곳 부산에 정박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공식해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다 항로를 통한 핵무기 또는 폐기물의 유통가능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감시와 환경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산의 양정1동에 주둔한 미군의 경우 주택가 바로 옆에 레이다로 확인된 물체로부터 심각한 진동소음이 3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소음에 의해서 지반이 약한 이지역 주택들은 금이 갔으며, 정기적으로 3개월씩 주야간 지속적으로 나오는 진동소음과 주민들의 건강상의 문제도 역학 조사 해야 할 것이다. 이곳의 소음은 등가소음 66.7dB, 최고소음 78.4dB로 나타났다. 이소음은 다른 지역 소음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과 진동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지역 피해가 예상되며, 이소음의 원인자로 판단되는 레이다의 경우 원반의 전면에 산동네가 있으며, 고층아파트가 건립 중이거나, 건축된 상태여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더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가에 있는 레이다에 의한 전자파의 피해로 인한 심각한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 레이다에 의한 전자파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자레인지의 원리와 같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계속 두면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아주 큰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IV 기타의 경우

이번 환경조사를 통해 몇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발견했다.

첫번째, 레이더에 의한 생태계 파괴와 주민 피해에 대한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곳곳에는 미군시설이 있으며, 이 시설중 상당수가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원리가 전자레인지의 원리로 쓰인다고 할 때에 레이더 영역안에 있는 모든 자연 생태계는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국토에 깔려 있는 송유관의 문제다. 송유관의 시설이 최소 20여년 최대 40여년 되었다고 할때에 송유관에 의한 토양오염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에 송유관의 매설지역과 관리에 대한 공개적인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폭격장 문제이다. 이번 조사기간 중 폭격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통상 태백산이라고 불리는 영월군 상동면의 경우 미군 전용 폭격장이 있으며, 모의 활주로와 모의 관제탑이 있어 폭격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백산은 미족의 령산이라고 하여 지역 주민들도 경의시 하는 산으로 그 문화적 의미도 크지만, 사격장을 복원하는데 드는 비용이 1km를 복원하는데 18억달러가 들어가며, 액수를 무시하더라도 폭격장 사용후 불발탄 처리와 불발탄에 의한 주민 피해를 예상 할수 있다. 이러한 폭격장은 기본적으로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며, 지역의 지하수를 오염 시키고, 후손 들에게 최악의 씨앗으로 남을 수 있다. 그러기에 미군에 의한 폭격 연습장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미국 본토로 옮겨져야 한다. 더불어 그동안의 생태계 파괴와 지하수 오염, 지형의 변화, 불발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네째, 미군기지 주변에 자라고 있는 귀화식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단풍잎돼지풀 등을 흔히 발견할 수 있었다.

귀화식물은 70%가 유럽과 북미, 중미가 원산인 식물이고,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래종 식물의 이입이 급증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발전과 산업의 현대화가 가속되면서 수출입의 양이 증가하고 특히 곡물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식물들이 이입되었기 때문이다. 단풍잎돼지풀과 미국쑥부쟁이 등이 국내 미군 기지촌 근처에서 발견된 후 주변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는 미군들의 식량을 미국으로부터 직접 공수해옴으로써 원산지에서 직송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외국 식물의 이입은 단순히 종이 증가하는 차원을 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귀화식물은 돼지풀과 서양등골나물, 그리고 미국자리공이 대표적이다. 돼지풀은 유원지로 알려진 곳이면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풀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며 서양등골나물은 파괴된 산림생태계에 자라며 사람과 소의 건강을 위협하는 독초이다. 미국자리공은 공기오염으로 인한 토양의 산성화가 진행된 산림에서의 생육상태가 상상을 넘을 정도이기 때문에 산림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주장과 그러하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공방속에서 식물 자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식물사회 전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한종의 식물이 살기 위해서는 토양의 미생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들이 생명을 다했를 경우 그들을 분해해줄 미생물들이 있어야 한다. 그들의 환경속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의 자연생태계속에서는 치명적인 병원균으로 작용하여 자생식물을 멸종시킬 수도 있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귀화식물들이 그들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현실은 분명 우려할 사항이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이 살고 있는 위치가 길가, 인가 근처 등 인간에 의해 훼손된 지역에 자라고 있음을 상기해 볼때 대지를 피복하고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는 등의 유익한 점도 없지는 않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귀화식물의 분포를 파악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V 결론

요즘은 환경안보라는 개념이 생길 정도로 환경을 주제로 하는 문제점들이 많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장기간 우리의 땅을 점유하면서 항상 땡땡거리며 미군들이 우리의 강산을 어떤식으로 파괴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번 조사사업을 진행했다. 우선 미군기지에 직접 들어가 오염원을 찾아내고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은 정부 당국에게 양보 하겠다. 더불어 한 국민으로서 가장 부담 되는 것은 우리의 땅임에도 미군 부대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필리핀의 경우처럼 독성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있지는 않는 지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다. 미국정부 스스로도 타국에 주둔하는 미군 병사들의 환경(자연, 지하수 등, 생태환경)을 안정적으로 확보할수 없음과 이미 많은 오염으로 인한 위험한 상황임을 93년도에 이미 인정한 사실을 비추어 볼때 한국정부는 당당하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땅에 대한 권리와 이 땅과 지하수를 포함한 것에 대한 오염 조사권과 오염된 지역에 대한 원상 복구의 의무를 미군 정부에 요구해야 하며, 이러한 국가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과 환경오염의 구제

성재호 (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

미군은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구역을 사용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그 부속문서 등에서 언급하고 있다.

동 협정에 근거하여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일정한 시설과 구역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환경오염문제를 들 수 있다.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의 환경오염실태는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전달되고 있는 바이나, 이에 대하여 동 협정을 통해서도 명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그 해결책은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기 위하여,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의 관련 조항을 들여다보고, 그 규정상의 한계는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허여하며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2조 시설과 구역 - 공여

1. (가)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 협정은 본 협정 제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 시설과 구역은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존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제3조 시설과 구역 - 보완조치

1.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은

또한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전기의 목적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

1.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 동 시설과 구역에 가해진 개량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상의 규정들이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할 수 있는 SOFA 조항들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SOFA상에는 환경에 관한 직접적 규정은 없고, 다만 제3조에서 '시설과 구역 안에서 시설과 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한미간에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를 합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뿐이다. 동 규정에 따라 합동위원회는 현재 1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 중의 하나로 환경문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조약상으로는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측 위원과 미군측 위원이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유일한 해법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오염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에 대한 시정에 관한 문제는 SOFA 개정 과정에서 환경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합의를 도출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의 논의결과를 보면 우리측의 환경문제 요구는 미국측에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SOFA 개정시 환경보호를 위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SOFA상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오염된 미군사용 시설이나 구역의 원상회복 문제라 할 수 있다. 제4조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군측이 공여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 따라서 동 협정으로는 환경오염이 누적된 미군 이용 시설이 우리에게 되돌아 올 때에 우리나라는 아무런 배상이나 보상요구도 취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 배경이 미군측의 改良에 따른 相計的 意味를 예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환경오염의 구제는 장기의 시일을 요할 뿐만 아니라, 구제 비용도 오염원인 행위보다 과중한 것이 일반적인 것이므로, 동 규정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은 동 조항의 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점에서 SOFA는 환경문제를 접근하기에는 본질적 한계를 안고 있고, 현재 한미간에는 동 협정을 개정하자는데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단계이므로 여타의 조항에 대한 개정 작업과 함께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 규정이 포함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환경오염의 주범 미군기지를 고발한다

- 주한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우리 <녹색연합>과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전국공동대책위원회(준)>는 96년 10월 말부터 11월초까지 약 3주에 걸쳐 전국 미군기지의 환경을 조사하였다. 연인원 1백여명이 동원된 미군기지 환경조사는 1945년 미군이 우리 땅에 진주한 지 52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서, 우리는 민족사를 바꾸는 과업을 수행하는 심정으로 수행하였다.

1967년 불평등하나마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제정한 것은 그나마 우리나라가 자주독립국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획득한 것이었다. 그 뒤 1991년 일부 불평등 조항들을 고치긴 했으나 아직도 불평등한 조항들은 너무나 많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신병 인도가 거의 불가능하도록 규정해 놓은 22조의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은, 미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온 국민의 분노를 살 만큼 불평등하다. 민사청구권이나 노무자 처우, 출입국, 통관 관세, 비세출자금기관, 과세, 보건과 위생 관련 조항 등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31개 조항 모두가 불평등하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환경과 관련된 조항은 들어 있지도 않다. 다만 4조 1항 시설과 구역(시설의 반환) 조항을 환경과 관련해 원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조항에는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미군이 기지와 주변 환경을 완전히 파괴하고도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면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5조 2항의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있어 주민들이 미국을 상대로 어떤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놓았다.

우리는 APEC 기간이던 지난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미군 독성 폐기물과 미군기지 정화에 관한 1996년 국제 포럼”에 참가하였다. 그 포럼에 참가한 필리핀, 한국, 일본, 오키나와, 파나마, 푸에르토 리코, 미국 등의 1백여 대표들은 미군기지의 환경 정화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임대기간이 끝난 미군기지 반환 이후 사람 살 수 없을 정도로 각종 중금속과 독성 폐기물에 오염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기지 반환 이후라도 환경 정화비를 요구하는 필리핀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지 반환 이후의 환경 복구비만이 아니라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 파괴와 오염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요구한다. 언젠가 기지 반환 이후 원상회복이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때늦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3일 미일 양국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 기지의 21%인 11개 미군기지의 일부나 전부를 폐쇄하고, 미군 비행기의 이착륙 소음을 규제하며, 후텐마 비행장을 5-7년 이내에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미군기지 임대기간이 끝나는 97년 5월 14일 이후 지주들이 임대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난 95년 9월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초등학교 여학생 집단 성추행 사건 이후 미일 양국 정부가 1년 남짓 협상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 과정

에서 일본은 클린턴의 사과를 받아 냈으며, 주일미군은 반성의 날까지 선포하며 사죄하였다.

일본 만이 아니라, 필리핀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나라에는 미군 기지의 임대 기간이 못 박혀 있다. 주한미군이 우리의 환경을 마구 파괴하고 오염시켜도, 그런 것을 규제할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어도, 기간만 정해져 있으면 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임대기간도 임대료도 전혀 없다. 성추행을 넘어 엽기적 살인 사건이 꼬리를 물어도 클린턴은 커닝 미군사령관이나 부대장조차 사과를 하는 적이 없다. 이는 미국 정부의 오만방자한 태도와 한국 정부의 예속적이고 굴욕적인 자세 때문이다. 양국 정부의 이런 대조적인 모습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가운데 형사재판권과 관련된 지극히 부분적인 개정 협상에서조차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해 5월 지하철 층무로 역 주한미군 집단난동 사건 이후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여론이 일자,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개정 협상을 시작하면서 96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그 협상은 이미 결렬되었고,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김영삼 정권의 임기 안에는 부분 개정조차 불가능할 전망이다.

우리는 한미 양국 정부에게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전면 개정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번 미군기지 환경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미 양국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즉각 전면 개정하라!
1.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환경관련 조항을 삽입시키되, 국제적 추세인 오염자 부담 원칙, 환경 파괴에 대한 복구 의무, 환경 오염 조사 의무, 환경 오염 복구비 적립 의무, 미군기지 환경 오염 감시 등을 반드시 명기하라!
1. 한국 정부는 미군에게 반환 받은 미군기지는 물론,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미군기지의 환경을 즉각 조사하라!
1. 주한미군 당국은 미국의 '국민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s)'에 따라 미군기지 환경 오염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하라!
1.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오폐수 무단 방류, 지하수 오염, 폭격과 비행기 이착륙 등 폭음과 굉음에 시달리는 기지 주변 주민들의 피해 실태를 즉각 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함은 물론 그 피해를 전면 보상하라!
1. 주한미군 당국은 미국의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s)'에 따라 미군기지 환경 오염 실태를 즉각 공개하라.
1. 한미 양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미군기지의 임대기간을 정하고 주민의 요구에 따라 미군기지를 반환하라!
1. 미국 정부는 미군기지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한국 정부는 미군기지의 임대료를 징수하라!
1. 불평등한 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그러면 철수하겠다"며 협박하는 미국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1996년 12월 4일

녹색연합/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준)

〈미군 공여지 반환운동 변천 기사 및 자료〉

〈미군기지와 시민생활〉 ----- 1. 기지촌의 대명사 동두천의 진실은 ?

동두천민주시민회 사무국장 강 홍구

동두천 사람들이 미군기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직간접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느끼고 있는 것은 「동두천에 미군기지가 있다」라는 가시적인 사실에서 오는 외지인들의 그릇된 편견과 오명, 그리고 동두천 전체를 싸잡아 생각하는 그릇된 선입견의 피해이다.

동두천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동두천에 산다'는 이유하나 때문에 외지인에게 무의식적인 곱지않은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시선에 불쾌감과 불이익을 당한적이 있을 것이다. 필자의 경험으로도 중고등학교때 수학여행을 가서 외지인이 '어디서 왔냐'는 질문에 동두천이라고 말하면 야릇한 호기심(?)의 시선이 싫어 머뭇거리거나 능청스럽게 '천두동'이라고 말해서 서울의 일개 동(同)인양 생각하도록 하게하는 웃지못할 아픔(?)에서 부터, 동두천에서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하고 다니는 여자는 모두 000 라고 생각 했었다는가 하면, 동두천 같은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 지 모르겠다는 등 ...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지난 근 반세기동안 '동두천에 미군기지가 있다'는 사실을 뛰어 넘어 「동두천 = 미군기지촌」, 「동두천 사람 = 000 사람」이라는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의 잣대를 가지고 동두천과 동두천 사람을 임의대로 제고, 평가하며 미군이 아닌 같은 민족에게 이방인이 아닌 이방인의 대접과 수모를 받아 온 것이다.

그렇다고 현실점에서 무비판적으로 동두천은 미군 기지촌이 아니었고, 일부 기지주변에 한에서 기지촌이 형성되었다고 항변 한들, 수십년간 인식되어 온 것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우리가 받아온 불이익을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것도 우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지인이 동두천에 대해서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든, 그릇든 간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드리고, 왜 동두천을 한번도 와 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되었는지를 철저한 분석속에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 보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여개 미군기지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데 미군기지촌이 형성된 도시는 용산, 부산, 대구, 평택, 군산 등 동두천을 포함해서 27여개(70년대에는 60여개 도시) 정도가 된다. 그중에서도 대도시 미군기지촌을 제외하고는 군사적으로나 기지의 규모와 시설에 있어서 동북아시아의 단일 미군기지로는 최대 규모라는 미 보병2사단이(캠프 케이시, 호비, 남불 등) 동두천에 주둔함으로써 동두천에는 거대한 기지촌이 형성되었다.

지금의 보산동 일대의 기지주변(특히 미 보병 2사단 사령부 본부였던 '캠프 케이시' 정문에서 시작하여 경원선 철로변을 따라 형성된 보산동 기지촌)에는 미군전용클럽을 포함해서 미군을 상대로 하는 크고작은 다양한 점포(번성기때는 미군전용클럽 40여개를 포함하여 300여개 이상의 점포군집)가 생김면서 엄청난 상권이 형성되면서 인구급증을 가져왔다. 70년대에 항간에는 동두천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로 서울의 동대문구를 사고도 남을정도 였다는 믿기지 않는 말이 돌 정도로 엄청난 경제권이 형성되었고, 자연스럽게 미군을 황금알 낳는 오리로 생각하면서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인들이 너도나도 동두천의 기지촌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주민(토박이)은 1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었고 대부분이 외지인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군기지촌의 문화에서 병폐적으로 파생되는 성의 매매춘이 급격하게 발달(번성기에는 미군을 상대로 매춘를 하는 여성이 공식적인 수만 6000여명을 넘었으며, 비공식적으로는 10000여명 넘었다고도 한다. 단적인 예로 다른지역에서 볼 수 없는 성병관리소를 운영을 하였을 정도였다.)되면서 미국의 쓰레기같은 퇴폐문화가 기지주변지역에 젖어들면서 다방면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다. 그렇다고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정이 낙후된 관계로 미군기지촌 지역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관할 기관에서는 묵인 또는 반(半) 조장을 도모했리라 짐작한다.

어쨌든 동두천은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도시발전, 제한적인 지역발전, 그리고 지역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회문제를 동시에 안게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적인 냉전구조가 깨지면서 미군철수가 거론되고 급기야 감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80년대 이후 국민적으로 반미 감정이 고조되면서 미국정부는 일면의 정책을 수정하게 됨에 따라 80년대 말부터는 전국의 미군 기지촌은 서서히 쇠퇴기로 전락하게 되면서, 지금에 와서는 로마의 영화를 꿈낸듯이, 동두천의 기지촌에서도 여타의 기지촌처럼 전업을 하거나 영업의 대상을 한국민으로 바꾸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가지 집고 넘어갈 것은 미군을 상대로 돈벌 사람은 동두천을 모두 떠났다는 것과 돈은 '동두천에서 벌고 쓰는 것은 서울에서 썼었다'는 항간의 말처럼 전혀 지역에 재투자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우리 동두천은 미군기지의 주둔으로 하루아침에 소박한 삶과 희망을 산산히 빼앗겼고 개발독재정권과 파렴치한 자본가들의 부를 축적하는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남기고 간 온갖 오물속에서 기지촌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쓰고 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기지촌의 대명사라고 말하는 동두천의 현실이다. 그 누가 우리에게 돌(?)을 던질 것이며 그 누가 동두천을 버려진 땅이라고 외면하고 조소를 보낼 것인가?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왜곡된 역사의 중심에서 온몸으로 부딪치며 살아 왔기에, 우리는 우리의 빼앗긴 삶과 희망을 찾고 동두천을 희망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 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모두 한결같은 하나의 마음이다. 또한 우리는 지금 희망의 첫걸음 「동두천 미군기지 임대료 징수에서 국립대학 유치를 위한 범시민 운동」을 내딛고 있다. 이제 동두천은 버려진 땅도, 기지촌도 아닌, 소박한 사람들의 희망이 있는 땅이다.

동두천은 미군의 범죄천국 !!

92년 10월 28일, 전국민들은 동두천의 윤금이씨가 주한미군 2사단 소속 '케네스 마클'에 의해 자궁에 콜라병이 박히고 항문에 우산대를 꽂힌 채로,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당했다는 보도에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떨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는 동두천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살해미군의 구속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결국 주한미군 범죄 50년사만에 미군 범죄자를 한국 재판부에서 공개적으로 처벌을 하게되는 역사의 한 장을 열었다. 아직도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동두천의 보산동 거리를 가득 메운 동두천 시민들의 분노의 함성이 우리의 귀가에 살아있다.

그러나 윤금이씨가 살해된지 3년이 지난 지금, 미군범죄는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잔인하고 대범하게 백주대낮에도 한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자행되고 있다. 심지어 올해만해도 우리는 한달전 개만도 못한 인간 취급을 받는 수모를 당하는 사고(미군군견에 의한 상해사건)에서 부터 미군의 이 유없는 폭행으로 하루아침 반불수 장애자가 되고, 미군차량에 의한 사고로 생명을 뺏앗기는가 하면, 정신분열증자 환자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의 이웃이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고 치료비로 인한 빚더미로 안고 억울함과 분노를 가슴에 묻은 채 돌아가고 있다.

1945년 9월 미군이 이 땅에 발을 디딘 이후, 10만 이상의 한국 국민들이 미군에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겨왔다. 주한미군이 연평균 2,200여건(하루 평균 5건)의 미군범죄가 100여개 주둔 지역의 매매춘 여성과 주민들, 그리고 미군이 확보하는 전국토의 모든 국민들을 겨냥하여 절도, 폭행, 강간, 살인 등 무자비하게 저질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 범죄와 횡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우리에게서는 자구책마저도 갖고 있지 않고 있다. NATO 가입국에서는 미군범죄의 52%가, 일본에서는 32%가, 필리핀에서는 21%가 주둔국 법정에 오르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0.7% 만이 우리 법정에 오르며, 주한미군 당국은 강간범이나 살인범과 같은 잔혹범죄자들에게 대해서도 윤금이씨 살해사건 이전에는 감봉이나 본국소환 등의 가벼운 징계조치만 취하고 있다.

또한 우리에게 더욱 분노를 갖게하는 것은 범죄자의 처벌은 고사하고 범죄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 심지어 죽음을 당하더라도 어떠한 손해배상도 즉시 받지 못하고, 그나마 SOFA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를 밟더라도 1년이나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배상금이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터무니없는 배상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은 미군범죄로부터 이중적인 피해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미군범죄가 이렇게 심각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

먼저 한국민을 멸시하는 미군의 우월주의(?)에서 비롯한 오만불손한 자세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 오는 미군은 대부분 할렘가 등 빈민가 출신으로 자국에서 온갖 양키의 퇴폐문화에 젖어 특별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르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에 지원하여 한국에 와있고, 자신들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오만함으로 한국민을 멸시해 마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둘째, 미군범죄에 대해 자주적으로 법집행을 하지 못하는 한국정부의 사대적인 태도와 한국 경찰의 소극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다.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 행사율 0.7%가 말해 주듯이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시말해서 미군은 범죄를 저지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 속에 잠재되어 범죄를 쉽게 저지르고 처벌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에서도 미군범죄를 왜 당했냐는 식으로, 오히려 한국인 피해자에 불성실하게 대하고 형식적인 조사만 마친 후, 미군 범죄자는 물론 사건의 처리 과정도 모두 미군당국 쪽에 위임하다시피 하고 있다. 즉 한국정부는 한미관계라는 특수성과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미군범죄를 양성화시키고 미군범죄의 면죄부가 되고 있는 SOFA(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지위협정, 한미행정협정)라는 세계역사상 유례없는 불평등 협정 때문이다. SOFA는 제 2의 을사보호조약이라 불릴만큼 주권을 가진 국가간에 맺은 협정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자주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미군범죄자에 대해서 처벌은 고사하고 1차적인 수사권, 재판권마저도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미군범죄는 엄청난 규모에서 보나, SOFA 등 한미간의 불평등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에서 보나 피해자와 그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족자주권과 자존심의 문제이다. 미군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한국정부와 경찰이 오히려 미군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외면하고 있는 불행한 현실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미군범죄는 이 땅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계속되어 질 것이며, 동두천 아니 한국은 미군범죄의 천국으로 영원할 것이며, 한국민들은 미군범죄의 사냥감인 희생물로 영원히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오직 하나이다!!!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현황과 동두천 미군기지 현황

동두천민주시민회 사무국장 강 홍구

주한미군의 역사는 1945년 9월 8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인천에 상륙한 미 24군단 휘하의 2개 사단은 하지(Hodge) 중장의 지휘 아래 이튿날부터 한반도의 38선 이남 지역을 지배, 통치하는 점령군으로서 주둔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의 병력은 약 4만 5천명 정도이다.

현재와는 달리 남한 내에서 군정을 펼치면서 통치자인 양 행사하다시피 하던 당시의 주한미군은 '애치슨 선언'에 따라 1949년 6월 29일에 일단 철수하였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즉각적으로 UN 16개국 참전국의 지도자격으로 대규모 군대를 남한내에 투입하였고, 당시에 미군이 가장 많았을 때는 약 32만 7천명에 달하기도 하였다.

1953년 휴전협정에서 모든 외국군의 철수가 규정되었지만 주한미군의 철수는 미온적으로 진행되면서 1957년(한일협정 체결) 약 7만명, 1971년(닉슨 독트린 발표) 미 7사단이 철수한 이후로는 약 4만 5천명 내외를 유지해 오다가 카터의 철군정책으로 3천 5백명 정도가 감소이래, 큰 변동없이 지금의 약 3만 7천명 내외를 유지하며 전국의 100여개 미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다.

주한미군이 자리잡고 있는 기지는 모두 6개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서울 이북 비무장지대까지의 경기도 지역이 1구역, 강원도의 동부전선이 제2구역,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인지구가 제 3구역이다. 동양에서 불길한 수로 말하는 '4'를 건너 뛰어 대구-경북지역이 5구역, 충청남북도가 6구역 그리고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부산, 제주도까지 포함한 남부가 제 7구역으로 분류된다.

이와같이 6개 구역에서 100여개(95년 국방백서--96개)의 미군기지가 1억만평(남한면적 0.33%)의 땅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미군기지가 주둔지역의 노른자위 땅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100여개 미군기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지는 각각 제1구역과 제6구역에 위치한 미 2사단과 오산 공군기지이다. 또한 수에 비해 방대한 규모로 산재해 있는 주한미군의 중추로 기능하는 주한미군 사령부는 제3구역의 핵인 용산기지 안에 자리잡고 있다.

아무튼 <그림 1>에서 보듯이 남한 전역에 미군기지 방대하게 산재되어 있고 대부분의 미군기지가 도시 중심에 위치하여 이 땅의 주인인 양 행사를 하며 국가적, 지역적, 국민적으로 막대한 손해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인디안 머리」를 사단 표장으로 하는 미 2사단 동두천 미군기지는 <그림2>에서 보듯이 경원선과 3번국도를 따라 남북으로 2km, 소요산과 왕방산 사이의 분지지대에 동서로 4km 정도, 약 250만평에 달하고 있다.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는 미보병 제2사단의 21개 CAMP 중에 6개 CAMP(CASEY, HOVEY, MOBIL, NIMBUL, CASTLE, H-220)가 위치하고 있다.

동두천 미군기지는 사단 직할의 비행, 통신, 공병, 정보대대 그리고 기갑, 전차부대 등이 있고 그밖에 부관중대, 화학중대, 군악대 등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각종의 지원을 담당하는 지원사령부가 동두천 각 캠프에 걸쳐 의무, 병참, 정비대대와 자재관리부, 헌병중대, 재정지원대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이밖에 세계의 전투여단 가운데 두개의 여단이 본부를 두고있다. 1여단은 100대 이상의 장갑차로 무장된 20기계화 보병5대대와 100대 이상의 전차로 무장된 72전차 1대대, 2대대로 구성되어 있고 1천5백명의 503 경보병 1대대, 2대대로 구성된 2여단이 있다. 특히 503 보병연대는 미 23 보병연대의 후신으로 3여단과 함께 비무장지대 근무를 담당하고 있고 CAMP H-220(일명 헬기장부대)에는 다수의 코브라 헬기가 배치되어 있다.

동두천 미군기지는 미국의 동북아군사전략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점으로 사용되며 그것에 걸맞게 단일지역 캠프로는 동북아 미군기지 중에 최대의 화력과 부대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부대시설에는 골프장(Nine Hall),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학교, 슬롯머신장, 사격장, 사교클럽(술집), PX 등의 다양한 시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산재되어 있다.

이와같이 공식적, 가시적으로 파악된 것만 해도 동두천의 1/3(기지 주변의 군사보호지역 포함)에 해당하는 땅(동두천의 노른자위 땅)에, 단지 그들의 군사전략적 요구에 의해 지역 대부분의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절대적 편의와 혜택속에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며 지역의 창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제 1의 장애요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참조) 일송정 「주한미군」 1988

다음주부터는 『미군기지와 시민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보겠음.

아 래

- 1--- 기지촌의 대명사 동두천 2--- 미군의 범죄천국 동두천
3--- 매매춘 AIDS . 마약군단 4--- 미군기지 주변의 교육환경

동두천 자주권 회복과 지방재정 자립토대 구축은 「동두천 미군기지 임대료 징수에서 국립대학 유치운동」으로 시작하자 !!!

동두천민주시민회 사무국장 강 홍구

해방 이후 이 땅에 미군이 주둔한 이래 '미군기지'에 관해서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때문에 급기시 되어 왔다. 물론 동두천 윤금이 살해사건 이후 미군범죄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거나 범죄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동두천 지역에서 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이 여타 지역보다 활성화 된 상태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미군기지 철수나 이전의 문제는 생존권 문제와 결부되면서 지협적으로 제기는 되었으나,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관심사로 제기되지 못하고 대부분 구체적인 대안을 갖지 못하는 구호적인 운동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미군기지 주둔에서 파생되는 각종의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주민들에게 떠맡기게 됨에 따라 '미군기지의 문제'가 새로운 시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즉 동두천시 경우, 시 전체면적 95만KM 중에 70%가 임야이고 30%가 가용면적인데 동두천 미군기지가 가용면적 1/3에 해당되는 면적인 약 250만평이 시내중심에 산재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시 면적 50%(41만 45KM)정도가 군사보호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두천의 미군기지가 반환(이전, 철수)되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전까지는 동두천시의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은 있을 수 없으며 지역발전은 일정한 선에서 한계에 봉착되고 말것이다.

그렇다면 왜 '철수'나, '이전'이 아니고 '기지 임대료 징수에서 국립대학 유치'인가?
먼저 '철수'는 미군이 우리 땅을 강제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데 남북대치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는데는 설득력의 부재에서 오는 한계성이 있다. 그리고 '이전'은 어느 정도 시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지만 '어디로 이전하느냐?'라는 질문과 대안제시에 새로운 지역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고 자치하면 지역이기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철수'와 '이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하면서 미군기지의 문제를 현실성 있게 접근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생활속에서 맞부딪치는 문제(주택난, 건축규제, 교통체증, 소음공해, 환경오염, 퇴폐문화, 미군범죄, 기형적인 도로건설 등)의 제기와 해결을 통해 미군기지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지의 '평화적 전환'과 '지역발전의 토대 형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미군기지 임대료 징수에서 국립대학 유치운동'은 다양한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을 통한 민족의 자주권 회복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전국적인 연대의 틀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미군기지의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는 SOFA를 개정하여 임대기한과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명시해야 가능한 것인데, 무조건적으로 불평등하니까 개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속에서 미군기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이중적인 고통과 피해를 해결하는 차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반환의 여건'과 '철수 이후의 사용도' 까지도 준비한다는 점에서 '미군기지 임대료 징수에서 국립대학 유치운동'이 지역적으로 볼때,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동두천 미군기지 임대료와 징수에서 국립대학 유치운동'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체계적이고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해 나가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을 따기 위해서 감나무를 흔들고 장대로 감을 떨어뜨려야 하는 시대적인 요구'가 우리에게 온 것이다.

우리는 더이상 민족의 자존심을 내어 던진 채 방관자로 전락하는 안일함과 무감각에서 벗어나 이 땅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시작합시다!!!

그러면 다음주에는 동두천시 자주권 회복과 재정자립 운동인 '동두천 미군기지 임대료 징수에서 국립대학 유치운동'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한미군'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 지 문

- 동두천시의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로부터의 전폭적인 특별지원대책을 촉구합니다. -

동두천시는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하고 민족상잔의 6.25전쟁으로 남.북이 분단되면서 휴전선과 인접한 최북단에 자리잡고 있는 군사도시로서 우리지역에 반세기가 다 되도록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인 문전옥답과 광활한 산야는 군사시설과 훈련장으로 징발당하고 정든 고향밖으로 이주하여 어렵게 살아오면서 공산주의를 증오하며 자유수호를 위하여 평화의 십자군으로 이곳에 주둔한 외국군인들과 서로 신뢰하면서 민주주의 우방국가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공산주의의 남침을 저지하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우리 7만시민들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사랑하기에 남북대치라는 특수입장과, 외국군인들이 주둔하는 군사도시의 특수여건 및 한.미우호관계를 깊이 인식하면서 군사적 안보요충지의 역할을 다하며 많은 고충과 불편을 참아가면서 오늘날까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생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두천시민에게 돌아온것은 군사보호지역, 미국정부 공여지등으로 토지이용이 전체면적의 75%나 규제되어 낙후된 도시로의 퇴보와 전락이었습니다.

한때는 외화획득의 거점도시가 되었다가 이제는 휘황찬란하였던 네온싸인은 사라지고 불거진 텅빈 상가가 자리잡고 있는 쓸쓸한 거리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군사도시가 형성되면서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범람으로 요란한 췌즈서양음악이 판치고 우리의 고유문화는 사라져갔고 위안부, 혼혈아가 새로 생겨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지촌으로 탈바꿈되어 질시와 비난을 받는 지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지촌이라는 모든 악조건을 감수하면서 외국군인들이 평화의 십자군으로 우리나라에 온 우방국가 군인들이기에 서로 돕고사는 이웃과 같이 친밀감을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지만 미군범죄는 사라지지않고 윤금이양 살해사건 군전 폭행사건등 파렴치한 행위가 늘어나고있어 문화와 관습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로 생각하기에는 피해자는 물론 많은 시민들이 이해못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3번국도 평화로 확 포장공사도 미2사단으로 인하여 2년간 지체가 되고있는 불행한 사태의 사례도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부르짖는 우방국과의 관계 남북이 서로 대화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탈냉전시대를 열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7만 시민모두가 이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칠흙같은 어둠은 사라지고 찬란한 여명의 새날이 밝아오듯 낙후된 도시에서 2000년대 꿈과 희망이 넘치는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로 발전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에서는 1995년 10월 14일 제48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원전원이 만장일치로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외무부, 내무부, 국방부등 관계기관에 대책을 건의하였으나 회답은 아직까지 없고 1995. 12. 12일 경기도에서 의원전원이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건의도 하였습니다.

하루속히 접점이 묶여있는 군사보호구역, 공여지등의 각종규제는 최대한으로 완화되어 지역이 발전되고 안보의 교두보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시를 위해서 중앙정부로 부터 항구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을 과감히 완화제거하고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분담금중 일정금액을 특별회계를 마련하여 이지역 특수 개발비로 보조해주는등 적절한 조치를 바라면서 우리 동두천시민 모두는 뜻을 같이하여 서명운동에 동참합니다.

1. 세계평화와 국토방위를 위하여 주한미군이 이지역에 계속 주둔하여야 한다면 군사도시화되어 각종 규제를 받으며 계속 침체될 수만은 없으므로 정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2. 정부와 미군당국은 국제정세가 과거 냉전시대에서 탈바꿈되었고 주한미군의 주둔목적과 역할이 많이 변화되었으므로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분담금중 일정액을 특별회계를 마련하여 우리지역의 지역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하여야 합니다.
3. 군사목적으로 제한되는 많은 토지중 국가안보상 또는 군사작전상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역개발에 장애요인이 되고있으므로 전체면적 95.24km²의 75%를 차지하는 71.77km²의 군사보호구역 및 미국정부공여지를 대폭 해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우리시 전체면적중 20.64km²를 점유하고 있는 군사시설지역은 너무 방대하므로 시내 주택가와 밀접하여 산재하고 있는 단위 부대들은 같은 영내로 이전 통합하고 공장부지와 아파트단지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 조치되어야 합니다.
5. 줄어들지 않는 비인도적인 미군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미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한.미행정 협정이 평등하게 개정되어 인권침해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기본권이 지켜져야 합니다.

공개질의서

지난 4월23일 미 2사단 걸산리 사격장 산불 진화 중 발생한 동두천시 산림계장을 비롯한 6명의 공익근무요원 죽음에 대해서 동두천 7만 시민들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슬픔을 금할 수 없다.

또한 20대 젊은 청년이 제대로 피워 보지도 못한 채 어처구니 없게도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한 산불을 진화 하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도 원통한데 5일이 넘도록 장례도 치루지 못한 채, 산불참사의 원인과 사인 그리고 책임자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7만 시민들은 더욱더 분노와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이에 동두천 7만 시민들은 고인들의 죽음이 왜곡되고 헛되지 않기 위해서 진상조사를 다각적으로 규명한 바, 우리는 이번 산불참사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주한미군 당국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고인들의 사인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바 아래와 같이 동두천 7만 시민들의 이름으로 주한미군 당국에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바이다.

이번 주한미군 사격장 산불 참사의 책임이 주한미군에 있다는 근거로는 4월 23일 산불 참사의 원인을 살펴보면, 산불 발화의 원인이 주한미군의 군사 훈련 중 연막 불발탄에 의한 것이며, 산불 발생 후에 초등진화만을 미군측에서 적극적으로 하였다면 이러한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산불 원인을 제공한 주범이라는 점, 산불 초등 진화를 방기 했다는 점, 사격장에서는 수시로 산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사전에 대비를 안 했다는 점 등을 확인할 때, 주한미군은 이번 사고의 주범이며 명백한 간접 살인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산불참사의 원인이 한국 경찰과 주한미군 소방관계자등 발표한 바로는 산불 진화 중 갑작스러운 회오리 바람이 고인들의 뒤를 덮치면서 순식간 고인들을 강력한 화염과 불길에 덮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진상규명 과정에서는 회오리 바람보다는 강력한 순간적인 폭발에 의한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의 근거로는 첫째, 아무리 강력한 순간적인 회오리 바람에 의해 고인들에게 화염이 덮쳤다 하더라도 20대 젊은이들이 몸에 붙어 붙은 상태라도 불을 끄기 위해서 어떠한 저항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것이며 젊음을 떠나서 인간이라면 반사적으로 어디든간 뛰었을 것이며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뒹굴렀을 것이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고인들의 시신을 확인한 119 구조대원이나 현장조사를 한 유족들도 한결같이 고인들의 저항의 흔적이 없고 이상하게도 7명 모두가 2-3m 반경에 모여 죽었다는 점,

둘째, 사고 현장 부근이 주한미군 '까스탄 사격장'(오스카 훈련장)이라는 사실, 이것은 사고 현장이 석목마을 뒤산인 관계로 석목주민이 미군들이 훈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고 이후에도 현장 부근에서 까스탄 훈련을 했다는 흔적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할 때, 사고 현장이 까스탄 훈련장의 부근이기 때문에 불발탄 내지는 관리 소홀로 까스탄이 사고 현장에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점.

셋째, 사고 당일 산불 발생 전에 주한미군 첼리 B중대가 완전무장한 채 모의전쟁 연습을 했다는 점과 함께 그 훈련을 까스탄 사격장에 했을 가능성과 사고 이후에 까스탄 사격장에서 훈련 했다는 흔적을 확인 했다는 점.

넷째, 사고 주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김원기씨(고인들보다 50M 이상 위에 있었음)의 당시 상황 설명에 의하면 산불을 다 끈 상태이며 고 산림계장이 사고 발생 직전에 근무요원들에게 산불 다 꺾으니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동료들도 점심을 먹을 갈 수 있다며 농담을 주고 받는 소리를 들었으며 방화선 밖에 있었던 상태에서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강력한 불길이 솟는 순간, 고 산림계장이 뛰어라는 소리를 듣고 김원기씨는 뛰었다는 것이며 강력한 화염이 방화선을 넘어서 고인들을 덮친게 원인이 회오리 바람이고 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김원기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고인들이 불을 진화하는 중이 아니고 불을 다 꺼가는 상황 내지는 불을 다 진화하고 휴식내지는 장비를 챙기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설사 고인들의 뒤 쪽에 불길이 남아 있더라도 바닥에 깔려있는 낙엽의 불길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회오리 바람인지는 몰라도 낙엽에 남아 있는 불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젊은 사람들을 저항도 피하지도 못하게 강력한 불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즉 회오리 바람과 어떠한 폭발성 물질이 결합이 되면서 강력한 화염이 동반한 것이 아니냐는 점 들을 고려해 볼때, 미군측,경찰측,소방서측,동두천시측의 발표는 어딘가 모순점이 있고 사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동두천 7만 시민들은 주한미군 당국과 한국 정부측에 위와 같은 참사에 대한 의혹과 모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해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산불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인들의 죽음을 욱 되게 한다면 동두천 7만 시민들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주한미군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일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1996년 4월 27일

동 두 천 민 주 시 민 회



공 개 질 의 서

수 신 : 레이니 주한 미대사
참 조 : 정 명 재
발 신 : 동두천 미군사격장확장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제 목 : 동두천 미군사격장 확장과 관련한 공개 질의

주한미대사님께

저희들은 동두천 광암동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지난 3월 15일 미 2 사단측은 동두천 광암동 소재 이갑순, 김석규씨 소유의 개인농지에 사격목표물용 중고 장갑차 8 대를 일방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아무리 군사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여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엄연한 개인재산이고 계속 농사를 지어온 땅을 한마디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점유한다는 것은 법 논리 이전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주민들은 백방으로 이번 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까지 16일째 농사도 포기한 채 거리에서 서명작업과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당국도 한국정부당국도 이번 일을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정부를 대표하여 한미간의 친선관계를 유지할 책임을 갖고 계신 대사님께서 이번 일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에 대한 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이번 처사는 명백한 재산권의 침해행위입니다. 제 아무리 중요한 군사상의 필요성도 그것이 부당한 처사일 경우에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군당국은 이번 행위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현재 배치되어 있는 중고장갑차를 즉각 철수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사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 이번 사격장은 쇠목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이곳이 사격장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마을 주민들은 출입에 심한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생명마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마을전체가 사라지게 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곳의 사격장 건설계획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사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3. 현재 동두천은 전체 면적의 51%가 공여지로 묶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이 겪는 재산상의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3, 40년전에 설정된 공여지를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사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996년 5월 2일

1996. 5. 2
13:30 ~ 15:30
미2사단 사격장 (석목진입로)

1. 일 시 : 1996. 5. 2 13:30 ~ 15:30
2. 장 소 : 미2사단 사격장 (석목진입로)

3. 참석자

- 미8군 작전처 로저스 문관
- 미8군 국방부파견실장 이봉영
- 국방부 관제보상계장 고충경 서기관
- 미2사단 사격장 관할 책임자 프렌시 문관
- 26사단 공병대 여규남 문관
- 도시행정계장 민선식

4. 주문내용

- 사격장 폐지요망
- 조속한시일내에 탱크 철수시킬 것

5. 조치의견

- 사격장을 이전 시키겠다. 방법은 소요산넛편, 남쪽지역에서 사격장 위치 선정하여 5.8일 국방부에서 모여 미2사단, 미8군, 26사단, 국방부 협의 하겠으며
- 사격장은 반경4km 이내에 민가, 주민이 없는 지역으로 선정하겠다.

5.3일 오전중에 미8군 로저스 문관이 미8군 작전처장 파카대령에게 보고하여 탱크를 철수시키겠다. 내용은 5.3일 오전중으로 연락 하겠다.

- 탱크철수는 미8군에서 미2사단에 지시하면 미2사단에 철수시킬 것이다.

매춘군단, AIDS군단 그리고 마약군단

동두천민주시민회 사무국장 강홍구

동두천에서 유년기를 보낸 20대 후반 이상의 사람들은 학교 다닐때 해마다 한번씩 겪게되는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해마다 팀스피리트 훈련이 벌어지는 1월 말부터 4월 사이에 미군들이 동두천에 들어오는 날이면 수업을 하다말다 도로 가에 일렬로 서서 기세양양하게 군용트럭을 타고 지나가는 미군을 향해 무한한 감사의 마음(?)으로 성조기를 흔들며 주던 일... 또한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젊은 여성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도로가에 서서 미군을 환영하던 모습...

그러나 우리가 환영해 주던 그들이 바로 이 땅에 저속한 양키문화를 뿌리고 우리의 누이들을 짓밟으며 그들의 더러운 욕망을 배설하고 간 주범들이었다. 우리는 지금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아직도 기지촌이라는 오명속에 세인들의 다가온 시선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지난 4월 초에 그들에 의해서 동두천은 섹스농장(sex farm)이라고 'USA TODAY 誌(미국의 2대신문)'에 보도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다시한번 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뒤돌아 보고 싶지않은 것이지만 어떻게 동두천이 전원적인 농촌도시에서 매춘도시라고 불리워질 정도의 오해를 받게끔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동두천지역 미군기지의 퇴폐향락문화에서 오는 시민생활의 해악을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 사회에 매매춘이 현재와 같이 확대된 근본적인 원인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처음 공창의 씨를 뿌린 것은 일본 제국주의였다. 일제가 조선에 상륙하여 식민지 지배를 공고히 하던 19세기 말부터 매매춘은 급격히 확대되었다. 1883년 일제는 본국의 매춘여성을 데려와 조선땅에 최초로 유곽을 설치했고, 1904년 신마지라는 최초의 공창을 허가한 이후 유곽은 서울은 물론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일제의 성침탈은 이에 그치지 않고 조선처녀들을 일본군의 위안부, 정신대로 강제로 끌고 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1945년 일제가 물러간 후 뒤이어 미군이 들어 오면서 반세기동안 주둔하며 우리의 누이, 언니들을 미군상대 위안부로 전락시켰다. 일제는 물렸갔지만 일제하 정신대의 비통한 역사는 기지촌의 양공주로 이어지고 현재도 수만명(?)의 미군상대 매춘여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굴절된 역사를 이어온 우리에게 단순히 매매춘을 사회적 필요악이라든가, 개인의 무질서한 윤리관념의 탓이라든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 의한 성상품의 형태로 파악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무책임한 일인 것이다. 적어도 우리에게 매매춘의 역사는 외세에 의한 민족자주권 침탈의 역사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기지 주변에는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예외없이 매춘여성이 존재하고 있다. 미군상대 직업적 매춘여성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몇년전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1만8천명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동두천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에 공식적인 숫자만 6000여명 <94년 현재 시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67명(정기적으로 보건검사를 받는 여성)으로 집계>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60,70년대의 기지촌 양공주와는 달리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미군이 상대하는 특정 매춘여성들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여대생을 포함한 일반여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우리지역에서도 유학, 국제결혼, 영어회화 공부, 단순한 성적호기심 등과 같은 명분으로 미군과 사귀기를 원하는 젊은 여성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지금의 기지촌 지역의 양상이 쇠퇴기를 맞이함에 따라 전업을 하거나 업종의 대상을 미군에서 내국인 상대로 변경함에 따라 국내 여성들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추세속에서 새로운 양상의 기지촌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미군상대 매매춘 외에도 내국인 상대 매매춘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매매춘을 겸하고 있는 여성의 숫자는 150만에서 200만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15세에서 30세까지의 여성 7사람 중 1명꼴에 해당되는 숫자다. 이처럼 내국인 상대 매매춘이 확대된 것은 남한의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이 파행적이고 기형적 구조를 가지게 됨으로 인해 퇴폐향락산업이 비대화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매매춘의 근본 뿌리는 미국, 일본 의한 제국주의 침탈에서 비롯된 것이며 미군기지는 매매춘을 유지시키는 상징적인 거점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두천도 미군이 주둔하면서 여타의 지역처럼 급작스럽고 무분별하게 양키의 퇴폐향락문화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자리잡음에 따라 하루아침에 전형적인 농촌도시에서 향락적 소비도시로 변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생활측면에서도 문화적, 교육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와 장애를 가져왔다. 물론 현재는 일정정도 퇴색하여 퇴폐향락적인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잔재들이 주민생활 곳곳에 잔재하여 우리에게 청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미군기지는 이런 매매춘의 거점 이외에도 미군은 에이즈(AIDS)의 씨앗을 뿌리는 주범이다. 동두천에도 에이즈 감염자가 비공식적으로는 상당수 있다. 이외에도 미군이 사용하는 마약류 그리고 PX물건 불법유출 등 시민생활에 쓰레기같은 퇴폐문화를 옮겨심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군들은 매춘군단, 에이즈군단 그리고 마약군단 이다. 매매춘의 본거지, 에이즈 특공대, 마약의 원산지, 도색잡지 창고인 미군과 미군기지가 우리에게 있는 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은 있을 수 없으며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기지촌이라는 오명은 벗을 수 없을 것이다.

보 도 자 료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각 외신 특파원

1996. 5. 1.

발신: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744-1211)

제목: 동두천 쇠목마을에 대한 미8군 사격장 확장 철회와 미군공여지 반환을 위한

“주한 미국대사관 항의방문 및 서명명부 전달”

1. 최근 동두천 미2사단 산불참사 등으로 인해 소위 '미군 공여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미군 공여지' 는 것은 미군이 미군기지와 별도로 확보해 놓은 땅을 포함한 것으로 동두천의 경우 전체 미군 공여지는 1천5백만평으로 동두천시 50% 이상을 미군이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수 미군 공여지의 경우 이미 주민들이 몇십년동안 살고 있고 일상적인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주민들에게 토지소유권이 국내법으로 보장된 땅입니다. 그런데 한미행정협정(SOFA)은 미군들에게 엄청난 공여지를 제공해, 한미행정협정 상으로는 미군들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즉 '미군의 땅'입니다. 이처럼 미군 공여지의 경우 주민들의 토지소유권과 미군들의 사용권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군 공여지 실태가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미군 공여지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3. 현재 동두천 쇠목마을 주민(11세대, 40여명)들은 미8군이 사격장 확장을 추진하면서 조상대대로 살던 땅에서 쫓겨나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에 따라 동두천 쇠목마을 주민들은 지난 3월부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천막농성 등을 벌이며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4. 본 운동본부에서는 동두천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에 적극 호응하고, 미군 공여지를 주민들이 돌려받기 위하여 동두천 쇠목마을 주민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활동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아 래 -----

주한 미대사관 항의방문 및 서명명부 전달

- * 일시: 1996년 5월 2일(목) 오전 11시
- * 장소: 광화문 미대사관 앞
- * 주최: 동두천 쇠목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 쇠목 마을 주민들이 2주가량 동두천시에서 농성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받은 서명명부를 쇠목마을 주민 대표단과 운동본부 대표단이 전달

상임대표: 전우섭(田禹燮, 목사)

<직인 생략>

이런 끔찍한 농성도 와동서위에는 후궁이 불꽃이 피는거다

보 도 사 로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각 외신 특파원

1996. 5. 2

발신: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744-1211)

제목: 동두천 쇠목마을에 대한 미8군 사격장 확장 철회와 미군공여지 반환을 위한

“ 주 한 미 군 범죄 근 절 을 위 한 운 동 본 부 ”

1. 최근 동두천 미2사단 산불참사 등으로 인해 소위 '미군 공여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미군 공여지' 는 것은 미군이 미군기지외 별도로 확보해 놓은 땅을 포함한 것으로 동두천의 경우 전체 미군 공여지는 1천5백만평으로 동두천시의 50% 이상을 미군이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수 미군 공여지의 경우 이미 주민들이 몇십년동안 살고 있고 일상적인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주민들에게 토지소유권이 국내법으로 보장된 땅입니다. 그런데 한미행정협정(SOFA)은 미군들에게 엄청난 공여지를 제공해, 한미행정협정 상으로는 미군들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즉 '미군의 땅'입니다. 이처럼 미군 공여지의 경우 주민들의 토지소유권과 미군들의 사용권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군 공여지 실태가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미군 공여지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3. 현재 동두천 쇠목마을 주민(11세대, 40여명)들은 미8군이 사격장 확장을 추진하면서 조상대대로 살던 땅에서 쫓겨나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에 따라 동두천 쇠목마을 주민들은 지난 3월부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천막농성 등을 벌이며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4. 본 운동본부에서는 동두천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에 적극 호응하고, 미군 공여지를 주민들이 돌려받기 위하여 동두천 쇠목마을 주민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활동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아 래 -----

주한 미군사령부 항의집회

* 일시: 1996년 5월 3 (금) 낮 12시

* 장소: 용산 미군기지 1번문 앞 (4호선 숙대입구 전철역에서 삼각지 방향 200M)

기타 활동 계획

1. 국방부 항의집회

* 일시: 1996년 5월 10일(금) 낮 12시

*장소: 국방부 앞

2.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과 미군 공여지 반환을 위한 대규모 집회

* 일시: 1996년 5월 11일(토) 오후 2시,

* 장소: 종로4가 종묘공원(가안)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744-1211)

상임대표: 전우섭(田禹燮, 목사)

<직인 생략>

미8군 사격장 확장계획 철회하고 미군 공여지 반환하라!

최근 동두천 쇠목마을 사태를 통해 미군 공여지의 문제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조상대대로 살던 마을에 어느날 갑자기 미군이 탱크를 배치하고 사격장을 만든다며 주민들을 내몰려 했다. 그 이유는 쇠목마을 인근이 1967년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미군 공여지로 양도되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 주민 그 누구도 한국정부나 미군당국으로부터 사전 협의나 통보 혹은 보상금 한푼 받은 바 없다.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정부가 미군에게 토지의 사용권을 갖다 바친 것이다. 어떻게 법치 국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헌법 23조에서도 사유재산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설령 국가가 개인사유지를 징발하더라도 법적인 절차와 정당한 배상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 행위이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농토를 미군들에게 빼앗기게된 농민들의 생존권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같은 사유지의 미군 공여지 제공이 쇠목마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 98개소에 존재하는 미군기지 주변에서는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동두천시의 경우 미군 공여지의 면적인 1천 5백만평으로 전체면적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엄청난 개인사유지가 미군 공여지가 되버린 것이다. 이것이 동두천에만 국한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한국정부가 군사기밀임을 내세워 미군 공여지 실태를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바로 내집과 우리 마을이 미군 공여지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군 공여지가 심각한 지경에 놓인 것은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의해서다. 미군은 1967년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개인 사유지를 포함 엄청난 땅을 기지와 시설로 사실상 무단 점유했다. 그런데 한미행정협정 제2조는 협정 체결 이전에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지, 시설에 대해서 미군의 사용권을 무차별적으로 인정해 버렸다. 즉 개인 사유지를 포함 막대한 토지가 미군의 수중에 '합법적'으로 들어가버린 것이다.

한국정부의 무책임과 미국의 패권주의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이 엄청난 사유지를 미군에 넘겨버린 것이다. 특히 우리는 개인땅을 주인도 모르게 불법적으로 미군에게 양도하고 또 그 실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국방부의 작태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미군당국은 쇠목마을에 대한 사격장 확장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한국정부는 사유지에 대한 불법공여 책임지고 공개사과와 피해자들에 배상하라!
1. 국방부는 미군 공여지 실태를 즉각 공개하라!
1. 미군 공여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를 원소유주에게 즉각 반환하라!
1. 미군 공여지 문제해결 없는 한미행정협정 개정은 기만이다.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하라!

1996년 5월 3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744-1211)

상임대표: 전우섭 (田禹燮, 목사)

동두천 절반이상 미군에 넘겨줬다

풍문 사실로 확인돼 ... 건축·도로개설 때 미군 동의 얻어야

동두천땅의 절반이상 넘겨줬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동두천시가 보관중인 군사보유구역 현(현) 도면을 단따라 그동안 풍문으로 사실이 음이 분명히 전체 행정구역 95.30군공역 48.85km(전체%)와 군사시설 보호구

역 41.45km를 합치고, 서로 겹치는 땅을 제외하더라도 70%이상의 면적이 시나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땅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난 4월23일 미군에 의한 산불로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들은 그동안 미군으로부터 입은 피해 및 범죄들을 상기하면서 미군공여지 반환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2년 윤금이 사건 등 미군에 의

한 끔찍한 범죄를 지켜본 시민들은 한·미간에 체결한 불평등한 행정협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공여지 도면입수해 사실 확인** 그러나 한미행정협정 본협정 제2조에 규정된 공여지에 관해서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왔다. 이 조항에 의하면 "합중국은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자신이 농사를 짓거나 오랫동안 살아온 땅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미군측에 공여가 됐는지 모르고 있다. 동두천시에서 이 문제가 처음으로 표면화된 것은 지난해 봄이다.

최송권(38·동두천민주시민회 회장)씨는 자기 땅에 가족코팅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여 70%의 진척을 보인 가운데 공사를 중단해야 했다. 미군측이 공여지라는 이유로 공사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국방부를 방문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공장을 겨우 짓고 가동할 수 있었다.

최씨는 "언제라도 미군측이 요구하면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철수해야만 한다는 각서를 제출하고서야 내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었다"고 어처구니 없게 말했다. 이처럼 시민이나 시는 집을 짓거나 도로를 확장·신설할 경우 일일이 미군당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광암동 석목마을에 사는 김병규(41·농업)씨는 석목리86번지에 60

평의 주택건축허가를 내고 착공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미군당국이 착공신고를 내주지 않아 현재 계획을 중단하고 있다.

오히려 미군측은 집터부근까지 사격장을 확장하려고 탱크를 진입시켜 놓고 있어 마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사격 훈련중일 때에는 주민들의 통행을 가로막는다고 한다.

이곳 사격장은 쇠목리로 통하는 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이전할 것을 요구해온 곳이다. 쇠목리 주민대표 김병규씨는 사격장 신설 반대 및 확장저지를 위해 동두천농협 앞에서 40여일째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내 땅에 공장 짓는데 미군이 허가 동두천시 관계자도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도 및 국방부에 건의를 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김규완 부시장은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도로를 신설하려고 해도 한미행정협정 때문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미군공여지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어려움을 털어 놓았다.

동두천민주시민회 부의장 강홍구씨는 "미군공여지 반환 및 축소가 동두천시 발전의 지름길"이라면서 "앞으로 서명·항의집회 및 청원서 제출 등의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해 반환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동두천=정상영 기자)



김병규씨가 자재를 쌓아놓은 채 공사를 못하고 있는 집터를 가리키고 있다.

보 도 자 료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각 외신 특파원

1996. 4. 30.

발신: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744-1211)

제목: "동두천 쇠목마을에 대한 미8군 사격장 확장 철회와 미군공여지 반환을 위한 활동" 참여 요청의 건.

1. 최근 동두천 미2사단 산불감사 등으로 인해 소위 '미군 공여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미군 공여지'라고 하는 것은 미군이 미군기지 외는 별도로 확보해 놓은 땅으로서 동두천의 경우 미군기지 250만평, 미군 공여지 1천5백만평으로 동두천시의 70%를 미군이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군 공여지의 경우 이미 주민들이 몇십년동안 살고 있고 일상적인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주민들에게 토지소유권이 국내법으로 보장된 땅입니다. 그런데 한미행정협정(SOFA)은 미군들에게 엄청난 공여지를 제공해, 한미행정협정 상으로는 미군들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즉 '미군의 땅'입니다. 이처럼 미군 공여지의 경우 주민들의 토지소유권과 미군들의 사용권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군 공여지 실태가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미군 공여지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3. 현재 동두천 쇠목마을 주민(11세대, 40여명)들은 미8군이 사격장 확장을 추진하면서 조상대대로 살던 땅에서 쫓겨나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에 따라 동두천 쇠목마을 주민들은 지난 3월부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천막농성 등을 벌이며 치열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4. 본 운동본부에서는 동두천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에 적극 호응하고, 미군 공여지를 주민들이 돌려받기 위하여 동두천 쇠목마을 주민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활동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아 래

1. 동두천 쇠목마을 미8군 사격장 확장계획에 항의하는 미대사관 항의방문 및 서명명부 전달
 - * 일시: 1996년 5월 2일(목) 오전 11시 (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 장소: 광화문 미대사관 앞
 - * 쇠목 마을 주민들이 2주가량 동두천시에서 농성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받은 서명명부를 쇠목마을 주민 대표단과 운동본부 대표단이 전달
2. 동두천 쇠목마을 미8군 사격장 확장 철회와 미군 공여지 반환을 위한 결의대회
 - * 일시: 1996년 5월 3일(금) 낮 12시, * 장소: 용산 미군사령부 1본문 앞
 - * 주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동두천 쇠목마을 주민대책위원회
3.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과 미군 공여지 반환을 위한 대규모 집회
 - * 일시: 1996년 5월 11일(토) 오후 2시, * 장소: 종로4가 충묘공원(가안)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744-1211)

상임대표: 전우섭(田禹燮, 목사)

<직인 생략>